

## 복지개혁의 시대



林 采 正

새정치국민회의 정책위 의장

IMF 경제위기는 전국민에게 심대한 사회·경제적 충격을 초래하였다. 경제적 구조 개혁을 통한 경쟁력의 확보는 국가의 사활이 걸린 최우선 과제가 되고, 이를 위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아야 했으며, 수십만의 개인들이 하루 아침에 직장을 잃는 등 실업의 고통을 경험하여야 했다. 그 동안 우리 나라 경제를 받치고 있던 재벌중심의 성장우선주의 신화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었으며, 자신의 직장을 평생직장으로 믿고 있던 개인들도 평생직장의 신화가 깨어지고 직장 과 가정에서부터 사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함에 따라 자기 자신과 사회를 다시 돌아보지 않으면 안되게 된 것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사회·경제적 변혁기에 고통받는 국민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실업자의 생계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의 구축을 추진하여 왔고, 재정출혈을 감수하면서까지 실업 및 빈곤대책에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물론 아무리 적극적 대응방안이라고 해도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한 단기대책은 한계가 있어 정부가 최대한의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많은 실업자와 저소득층의 고통은 아직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또한 고용유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 실

적극적 빈곤대책의 제도적 장치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과 함께  
새로운 각오로 성장과 복지, 효율과 정의의 화학적 조화를  
모색해야 할 때이다.

업자의 재취업을 돕기 위한 교육훈련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도 시행되었으나 그 효과가 단기에 나타나기는 어려우며, 더욱이 이와 같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인프라의 미흡 등으로 그 정책적 효과도 피부로 느끼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현대화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일이 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우리 나라 사회보장 발전사에 하나의 획을 긋는 중대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 어느 나라와 견주어도 부끄럽지 않은 적극적 빈곤대책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종전의 잔여적이고 시혜적인 생활보호제도라는 구각에서 탈피하여 국민중심의 보편적이고 현대적인 사회보장제도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더욱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은 국민의 정부와 국회가 시민사회와 함께 일구어 낸 쾌거라는 점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계기로 미흡했던 각종 사회보장 인프라도 대대적으로 구축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나라의 경제위기는 물론 아직 끝나지 않았다. Globalization하에서 현대사회는 본질적으로 위험한 요소를 수없이 많이 내포하고 있으며, 더욱이 한국사회는 그 동

안 축적된 문제들로 인하여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정적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제사회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고실업의 구조화 문제와 더불어 고용의 질이 악화되고 있고 이와 더불어 빈곤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또한 조세제도를 포함한 거시적인 분배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고 현대적 사회보장시스템에 대한 전사회적 인식이 낮다는 현실들이 이와 같은 사회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새로운 각오로 성장과 복지, 효율과 정의의 화학적 조화를 모색해야 할 때이다.

대통령의 8.15 경축사 이후 정부 각 부처가 축사에 포함된 주요 정책의 실천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생산적 복지를 위한 관련 부처의 후속대책도 발표되었다. 정권 교체와 함께 시작된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의 제도적 개혁과 더불어 추진되었던 복지개혁을 위한 행동에 시민사회도 적극 나서고 있다. 바야흐로 복지개혁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모쪼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통하여 한국사회가 갈등과 소외의 20세기에서 통합과 신뢰의 21세기로 발전하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길 바란다. 또한 이 제도를 구축하는 데 한데 모였던 전사회적 역량이 다시금 21세기 복지개혁의 주체가 되기를 소망한다. 